

제382회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0년9월21일(월)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3.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4.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7.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6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6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7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7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8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9. 군 휴가 중 폭행사건 관련 보훈혜택 부여에 관한 청원

상정된 안건

1. 2020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8
3.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8
4.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9
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장철민·홍성국·고용진·이상민·송갑석·박영순·이인영·황운하·여기구·김남국·장경태·김승원·이수진·한준호 의원 발의) 9
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이성만·김성환·박정·송옥주·권철승·이형석·송영길·신동근·박찬대·김교홍·이탄희·정일영·송갑석·허종식 의원 발의) ... 9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김성원·박대수·윤영석·이현승·유경준·안병길·소병훈·성일종·홍준표 의원 발의) 9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권인숙·양이원영·윤관석·조오섭·신정훈·이성만·김희재·허영·김홍걸·박홍근·서영석·남인순·윤미향 의원 발의) 9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김도읍·권명호·김태흠·윤영석·조경태·이명수·지성호·김태호·이철규 의원 발의) 9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동주·고영인·김경협·김영배·박영순·박재호·박정·서동용·양이원영·유정주·윤재갑·이원욱·이학영·임호선·전용기·정필모·한병도·홍익표·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9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동주·홍익표·윤재갑·김영배·고영인·유정주·양이원영·한병도·홍정민·박영순·임호선·정필모·이학영·전용기·황운하·박정·서동용·이원욱·김경협·박재호 의원 발의) 9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정춘숙·김경만·이용선·이개호·임종성·박정·이장섭·안민석·인재근·조오섭 의원 발의) 9
14.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송옥주·박정·정춘숙·민홍철·김영배·김경만·황운하·조정식·오영환 의원 발의) 9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박정·안민석·임종성·이성만·인재근·이장섭·이용선·이규민·이개호·조오섭·정춘숙·김윤덕·최인호 의원 발의) ... 9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이형석·신정훈·김경만·홍익표·이정문·송갑석·김철민·양정숙·김남국·임호선·이용우·양기대·이병훈 의원 발의) 9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 · 양정숙 · 장철민 · 전해숙 · 이해식 · 윤미향 · 황운하 · 양경숙 · 박성준 · 김남국 · 이형석 · 유동수 · 김경만 · 이수진(비) 의원 발의) … 9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 · 서삼석 · 오영환 · 김민철 · 박홍근 · 서영석 · 박성준 · 윤미향 · 노웅래 · 양정숙 · 김경만 · 김영배 · 박정 · 박재호 · 안규백 의원 발의) … 9
1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이원욱 · 이개호 · 인재근 · 송석준 · 윤미향 · 김경만 · 황운하 · 이성만 · 정춘숙 의원 발의) … 9
21.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 · 이용빈 · 민형배 · 전용기 · 최인호 · 이정문 · 임종성 · 이규민 · 정춘숙 · 김경만 의원 발의) … 9
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 · 태영호 · 송언석 · 김영식 · 윤주경 · 유경준 · 유동수 · 이종성 · 김정재 · 김용관 · 박진 의원 발의) … 10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 · 김경만 · 강선우 · 김영배 · 황운하 · 송갑석 · 이상현 · 김수홍 · 이용빈 · 박성준 · 송영길 · 민홍철 · 이수진(비) · 이용호 · 박영순 · 김성주 · 김영호 · 배진교 의원 발의) … 10
24.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이종성 · 임이자 · 김정재 · 김승수 · 김형동 · 김예지 · 김태호 · 김석기 · 이용 · 최승재 의원 발의) … 10
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 · 이용빈 · 변재일 · 김경만 · 이정문 · 양정숙 · 이원택 · 이탄희 · 김철민 · 홍익표 · 이해식 · 송영길 의원 발의) … 10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이원택 · 박성준 · 김영배 · 전해숙 · 전용기 · 김승원 · 김경만 · 김민석 · 윤미향 · 양정숙 · 권철승 의원 발의) … 10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강선우 · 이수진(비) · 용혜인 · 김경만 · 홍성국 · 박성준 · 박홍근 · 윤미향 · 김두관 · 장혜영 · 양정숙 · 우원식 · 이학영 · 진선미 의원 발의) … 10
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강선우 · 이수진(비) · 용혜인 · 김경만 · 홍성국 · 박성준 · 박홍근 · 윤미향 · 김두관 · 장혜영 · 양정숙 · 우원식 · 이학영 · 진선미 의원 발의) … 10
2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강선우 · 이수진(비) · 용혜인 · 김경만 · 홍성국 · 박성준 · 박홍근 · 윤미향 · 김두관 · 장혜영 · 양정숙 · 우원식 · 이학영 · 진선미 의원 발의) … 10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강선우 · 이수진(비) · 용혜인 · 김경만 · 홍성국 · 박성준 · 박홍근 · 윤미향 · 김두관 · 장혜영 · 양정숙 · 우원식 · 이학영 · 진선미 의원 발의) … 10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 · 송영길 · 박광온 · 윤재갑 · 이정문 · 이용빈 · 주철현 · 신정훈 · 송갑석 · 김민철 · 윤영덕 · 조오섭 · 이형석 의원 발의) … 10
3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인재근 · 이은주 · 용혜인 · 이수진(비) · 박성준 · 서동용 · 이학영 · 김경만 · 이성만 · 주철현 · 박홍근 · 남인순 · 양이원영 의원 발의) … 10
3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교홍 · 최기상 · 남인순 · 박홍근 · 우원식 · 임호선 · 양정숙 · 송영길 · 고용진 의원 발의) … 10
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송옥주 · 박정 · 정춘숙 · 양정숙 · 이상현 · 인재근 · 김경만 · 윤재갑 · 박성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2405) … 10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남인순 · 박홍근 · 우원식 · 임호선 · 김경협 · 고용진 · 이해식 · 윤재갑 · 최인호 · 이장섭 · 이동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409)	10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남인순 · 박홍근 · 우원식 · 임호선 · 김경협 · 고용진 · 이동주 · 이해식 · 윤재갑 · 이장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413) ...	10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남인순 · 박홍근 · 우원식 · 임호선 · 김경협 · 고용진 · 기동민 · 윤재갑 · 최인호 · 이동주 의원 발의)	10
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송옥주 · 박정 · 정춘숙 · 양정숙 · 이상현 · 인재근 · 김정만 · 윤재갑 · 박성준 · 이용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2475)	10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 · 신동근 · 문진석 · 김홍걸 · 민형배 · 안민석 · 기동민 · 김원이 · 김병기 · 황운하 · 김철민 · 송갑석 · 서영교 의원 발의)	11
4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 · 김병욱 · 신동근 · 안규백 · 안민석 · 윤관석 · 윤후덕 · 이용우 · 이정문 · 전용기 의원 발의)	11
4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 · 김병욱 · 신동근 · 안규백 · 안민석 · 윤관석 · 윤후덕 · 이용우 · 이정문 · 전용기 · 정일영 의원 발의)	11
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 · 김병욱 · 신동근 · 안규백 · 안민석 · 윤관석 · 윤후덕 · 이정문 · 전용기 · 정일영 의원 발의)	11
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 · 김영배 · 노웅래 · 맹성규 · 박상혁 · 박성준 · 박홍근 · 송영길 · 안규백 · 양이원영 · 윤관석 · 이탄희 · 이해식 · 전해숙 의원 발의)	11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최인호 · 이장섭 · 임호선 · 우원식 · 김교홍 · 고용진 · 신동근 · 홍익표 · 이동주 의원 발의)	11
4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 · 지성호 · 김예지 · 박대출 · 김기현 · 김석기 · 김승수 · 전주혜 · 이태규 · 김성원 · 김형동 의원 발의)	11
4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 · 이용빈 · 김홍걸 · 김종민 · 김민석 · 진성준 · 신동근 · 김병기 · 기동민 · 백혜련 · 허영 · 김윤덕 · 박성준 · 김정만 · 이용선 · 이장섭 · 김영호 · 김원이 의원 발의)	11
47.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박수영 · 김미애 · 유경준 · 안병길 · 윤창현 · 이주환 · 김은혜 · 김도읍 · 전봉민 · 황보승희 · 이달곤 · 조경태 · 장제원 · 김희곤 · 백종현 · 서병수 의원 발의)	11
4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 · 정성호 · 이용우 · 김정호 · 이은주 · 강은미 · 배진교 · 장혜영 · 류호정 · 양정숙 의원 발의)	11
4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임호선 · 김교홍 · 홍익표 · 이동주 · 전해철 · 이용선 · 신동근 · 고용진 · 권칠승 · 최인호 · 윤관석 의원 발의)	11
5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 · 이상현 · 김민기 · 유동수 · 김정호 · 고용진 · 이원욱 · 신현영 · 김교홍 · 정춘숙 · 전채수 의원 발의)	11
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5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 · 홍문표 · 송석준 · 박덕흠 · 이명수 · 태영호 · 서일준 · 박대출 · 유경준 · 백종현 · 홍준표 의원 발의)	11
5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 · 이형석 · 신정훈 · 김정만 · 홍익표 · 강병원 · 이정문 · 송갑석 · 김철민 · 양정숙 · 임호선 · 이용빈 · 윤재갑 · 김성주 · 조오섭 · 권인숙 · 장경태 · 이해식 · 윤건영 의원 발의)	11
5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정성호 · 유동수 · 권칠승 · 김승원 · 이해식 · 위성곤 · 홍성국 · 황운하 · 박성준 · 송옥주 · 송갑석 · 김정만 의원 발의)	11
5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 · 이용호 · 민형배 ·	

김민석 · 이장섭 · 김민철 · 한준호 · 안규백 · 김수홍 · 이해식 · 강득구 · 김철민 · 김두관 · 조정식 · 임종성 · 이수진(비) · 서영교 의원 발의)	11
5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 · 김승원 · 김정만 · 이은주 · 윤관석 · 노웅래 · 남인순 · 한준호 · 전용기 · 임종성 · 최종윤 의원 발의)	11
5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 · 소병훈 · 김영진 · 노웅래 · 김진표 · 진성준 · 김경만 · 윤준병 · 박성준 · 인재근 · 이인영 의원 발의)	11
5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김정호 · 박재호 · 최인호 · 허영 · 김홍걸 · 고영인 · 이병훈 · 정춘숙 · 송옥주 의원 발의)	12
6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이용우 · 양향자 · 이영호 · 인재근 · 소병훈 · 설훈 · 윤재갑 · 김용민 · 조웅천 · 윤영찬 의원 발의)	12
6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최인호 · 박재호 · 이병훈 · 김병욱 · 허영 · 김정호 · 이장섭 · 송옥주 · 김홍걸 의원 발의)	12
6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양이원영 · 주철현 · 조오섭 · 김경만 · 박영순 · 홍성국 · 이수진(비) · 윤미향 · 김용민 · 남인순 의원 발의)	12
6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최인호 · 박재호 · 김정호 · 이병훈 · 김병욱 · 허영 · 이장섭 · 송옥주 · 김홍걸 의원 발의)	12
6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 · 인재근 · 서삼석 · 조정식 · 조오섭 · 이장섭 · 민형배 · 안민석 · 권칠승 · 이동주 · 정춘숙 의원 발의)	12
6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 · 인재근 · 서삼석 · 조정식 · 조오섭 · 이장섭 · 민형배 · 안민석 · 권칠승 · 이동주 · 정춘숙 의원 발의)	12
6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양정숙 · 전해숙 · 최종윤 · 김병욱 · 박정 · 박성준 · 윤재갑 · 이수진(비) · 강병원 · 김희재 · 김경만 의원 발의)	12
6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최인호 · 박재호 · 이병훈 · 허영 · 김정호 · 고영인 · 이장섭 · 김홍걸 · 김철민 의원 발의)	12
6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 · 윤준병 · 강선우 · 이인영 · 이형석 · 정청래 · 홍익표 · 최종윤 · 진선미 · 전해숙 의원 발의)	12
6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홍성국 · 강선우 · 강준현 · 김경만 · 김민석 · 김영배 · 김희재 · 남인순 · 박성준 · 박정 · 송재호 · 신정훈 · 양경숙 · 어기구 · 이용우 · 이원욱 · 장경태 · 황운하 의원 발의)	12
7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이원택 · 박성준 · 김승원 · 김정만 · 김민석 · 윤미향 · 양경숙 · 권칠승 · 김두관 의원 발의)	12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이수진(비) · 신정훈 · 이상직 · 김경만 · 김두관 · 양정숙 · 홍영표 · 이성만 · 김형동 의원 발의)	12
7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 · 김성환 · 김남국 · 장경태 · 이원욱 · 김원이 · 우원식 · 박홍근 · 윤준병 · 이용빈 · 정필모 · 이소영 · 용혜인 · 강득구 · 안호영 · 이해식 · 위성곤 · 김정호 · 김한정 · 김영배 · 양이원영 의원 발의)	12
7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홍성국 · 김민기 · 이형석 · 강선우 · 김영배 · 김경만 · 이상직 · 김민석 · 이성만 · 박성준 · 윤재갑 · 정태호 · 김희재 · 이수진(비) · 이원택 의원 발의)	12
7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 김희국 · 송언석 · 정희용 · 이용 · 김희곤 · 류성걸 · 추경호 · 정진석 · 김상훈 · 윤창현 · 양금희 · 윤두현 의원 발의)	12
7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 · 홍정민 · 김철민 · 유정주 · 김승남 ·	

- 박홍근·조오섭·김정호·신정훈·이수진(비)·김병욱·고영인·이해식·양이원영 의원 발의) 12
7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김승원·오영환·홍익표·김병욱·이형석·정청래·김종민·박용진·김용민·송갑석·장경태 의원 발의) 12
7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권명호·최형두·김석기·김영식·박덕흠·송언석·이달곤·서범수·추경호 의원 발의) 12
78.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설훈·장철민·진선미·이재정·이장섭·우원식·박성준·강병원·김영배·민홍철 의원 발의) 13
7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김경만·이수진·박영순·최종윤·강훈식·이형석·김승원·정필모·이용우 의원 발의) 13
8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서삼석·오영환·정청래·강병원·송영길·허영·임오경·김용민·김종민·이장섭·김정호·박용진·안민석 의원 발의) 13
8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정청래·강병원·송영길·허영·임오경·김용민·김종민·이장섭·안민석·박용진·김정호 의원 발의) 13
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엄태영·유경준·안병길·이현승·이주환·홍영표·김교홍·홍준표·최승재 의원 발의) 13
83.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김희곤·태영호·정동만·강기윤·서범수·하영제·엄태영·이현승·전봉민·안병길·윤한홍·강민국·이주환·백종현·최승재·황보승희·김미애 의원 발의) 13
8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조오섭·양정숙·이형석·송갑석·신정훈·오영환·김남국·양향자·노웅래·윤미향·이용빈·윤영덕·정청래·서삼석·최종윤·민형배·전혜숙·김경만 의원 발의) 13
8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이용빈·송갑석·서삼석·전혜숙·양향자·이정문·이형석·강훈식·신정훈·강선우·김승남·이낙연·김성환·김희재·고영인·노웅래·강병원·신영대·윤영덕·문진석·홍정민·권칠승·이장섭·민형배·강은미·박정·서동용·윤재갑·정태호·홍성국·이규민·김수홍·이병훈·이상호·박범계·김교홍·조오섭·전해철·김민기·서영교·윤미향·설훈·이원욱·황희·유동수·양정숙·장경태·양경숙·인재근·강득구·소병철·김원이·남인순·진성준·한병도·주철현·이탄희·박광온·이학영·민병덕·정청래·김민석·안규백·윤영찬·이개호·김홍걸·송영길·김남국 의원 발의) 13
8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이용빈·이정문·이형석·강훈식·신정훈·강선우·김승남·고영인·강병원·윤영덕·민형배·윤재갑·서영교 의원 발의) 13
8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문진석·황운하·김윤덕·김원이·송갑석·김철민·민형배·이용빈·안민석 의원 발의) 13
8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윤주경·윤창현·태영호·이용·강대식·송언석·김기현·권성동·한무경·권명호·최승재·김희국·정경희·서범수·김미애·김상훈·윤두현·김예지·서병수·전주혜·서일준·엄태영·지성호·홍준표·유경준·조수진·김두관 의원 발의) 13
89. 군 휴가 중 폭행사건 관련 보훈혜택 부여에 관한 청원(문진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3

(10시03분 개의)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들을 처리하고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한 후 법률안 등 85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무조정실장은 기예정된 회의로 부득

이 오전 11시 이후 이석을 요청하여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허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윤관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등 7개의 국가기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소비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37개의 공공기관 그리고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감독원을 포함하여 총 45개의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장소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이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정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윤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정감사 중 출석을 요구할 증인 등에는 각 기관 소속 증인과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의결하는 사항은 각 기관에 소속된 기관증인 280명에 대하여 각각 출석요구일에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간사 위원 간에 협의가 되는 대로 위원장과 논의하여 추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요구된 기관증인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보직자가 증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변경된 전임자는 필요한 경우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윤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오늘 현재 위원님들께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신 국정감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총 1만 1754건입니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하여 9월 29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기관으로부터 각 의원실로 답변서가 제출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피감기관 감사 7일 전까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자료 요구를 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윤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 윤창현 위원이 각각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위원,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유의동 위원을 각각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박범계 · 장철민 · 홍성국 · 고용진 · 이상민 · 송갑석 · 박영순 · 이인영 · 황운하 · 어기구 · 김남국 · 장경태 · 김승원 · 이수진 · 한준호 의원 발의)

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이성만 · 김성환 · 박정 · 송옥주 · 권칠승 · 이형석 · 송영길 · 신동근 · 박찬대 · 김교홍 · 이탄희 · 정일영 · 송갑석 · 허종식 의원 발의)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 · 김성원 · 박대수 · 윤영석 · 이현승 · 유경준 · 안병길 · 소병훈 · 성일종 · 홍준표 의원 발의)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 · 권인숙 · 양이원영 · 윤관석 · 조오섭 · 신정훈 · 이성만 · 김희재 · 허영 · 김홍걸 · 박홍근 · 서영석 · 남인순 · 윤미향 의원 발의)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 · 김도읍 · 권명호 · 김태흠 · 윤영석 · 조경태 · 이명수 · 지성호 · 김태호 · 이철규 의원 발의)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동주 · 고영인 · 김경협 · 김영배 · 박영순 · 박재호 · 박정 · 서동용 · 양이원영 · 유정주 · 윤재갑 ·

이원욱 · 이학영 · 임호선 · 전용기 · 정필모 · 한병도 · 홍익표 · 홍정민 · 황운하 의원 발의)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동주 · 홍익표 · 윤재갑 · 김영배 · 고영인 · 유정주 · 양이원영 · 한병도 · 홍정민 · 박영순 · 임호선 · 정필모 · 이학영 · 전용기 · 황운하 · 박정 · 서동용 · 이원욱 · 김경협 · 박재호 의원 발의)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 · 정춘숙 · 김경만 · 이용선 · 이개호 · 임종성 · 박정 · 이장섭 · 안민석 · 인재근 · 조오섭 의원 발의)

14.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유동수 · 송옥주 · 박정 · 정춘숙 · 민홍철 · 김영배 · 김경만 · 황운하 · 조정식 · 오영환 의원 발의)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 · 박정 · 안민석 · 임종성 · 이성만 · 인재근 · 이장섭 · 이용선 · 이규민 · 이개호 · 조오섭 · 정춘숙 · 김윤덕 · 최인호 의원 발의)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 · 이형석 · 신정훈 · 김경만 · 홍익표 · 이정문 · 송갑석 · 김철민 · 양정숙 · 김남국 · 임호선 · 이영우 · 양기대 · 이병훈 의원 발의)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 · 양정숙 · 장철민 · 전해숙 · 이해식 · 윤미향 · 황운하 · 양정숙 · 박성준 · 김남국 · 이형석 · 유동수 · 김경만 · 이수진(비) 의원 발의)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 · 서삼석 · 오영환 · 김민철 · 박홍근 · 서영석 · 박성준 · 윤미향 · 노웅래 · 양정숙 · 김경만 · 김영배 · 박정 · 박재호 · 안규백 의원 발의)

1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이원욱 · 이개호 · 인재근 · 송석준 · 윤미향 · 김경만 · 황운하 · 이성만 · 정춘숙 의원 발의)

21.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 ·

이용빈 · 민형배 · 전용기 · 최인호 · 이정문 · 임종성 · 이규민 · 정준숙 · 김경만 의원 발의)

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 · 태영호 · 송언석 · 김영식 · 윤주경 · 유경준 · 유동수 · 이종성 · 김정재 · 김용관 · 박진 의원 발의)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 · 김경만 · 강선우 · 김영배 · 황운하 · 송갑석 · 이상현 · 김수홍 · 이용빈 · 박성준 · 송영길 · 민홍철 · 이수진(비) · 이용호 · 박영순 · 김성주 · 김영호 · 배진교 의원 발의)

24.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이종성 · 임이자 · 김정재 · 김승수 · 김형동 · 김예지 · 김태호 · 김석기 · 이용 · 최승재 의원 발의)

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 · 이용빈 · 변재일 · 김경만 · 이정문 · 양정숙 · 이원택 · 이탄희 · 김철민 · 홍익표 · 이해식 · 송영길 의원 발의)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이원택 · 박성준 · 김영배 · 전해숙 · 전용기 · 김승원 · 김경만 · 김민석 · 윤미향 · 양정숙 · 권칠승 의원 발의)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강선우 · 이수진(비) · 용혜인 · 김경만 · 홍성국 · 박성준 · 박홍근 · 윤미향 · 김두관 · 장혜영 · 양정숙 · 우원식 · 이학영 · 진선미 의원 발의)

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강선우 · 이수진(비) · 용혜인 · 김경만 · 홍성국 · 박성준 · 박홍근 · 윤미향 · 김두관 · 장혜영 · 양정숙 · 우원식 · 이학영 · 진선미 의원 발의)

2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강선우 · 이수진(비) · 용혜인 · 김경만 · 홍성국 · 박성준 · 박홍근 · 윤미향 · 김두관 · 장혜

영 · 양정숙 · 우원식 · 이학영 · 진선미 의원 발의)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강선우 · 이수진(비) · 용혜인 · 김경만 · 홍성국 · 박성준 · 박홍근 · 윤미향 · 김두관 · 장혜영 · 양정숙 · 우원식 · 이학영 · 진선미 의원 발의)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 · 송영길 · 박광온 · 윤재갑 · 이정문 · 이용빈 · 주철현 · 신정훈 · 송갑석 · 김민철 · 윤영덕 · 조오섭 · 이형석 의원 발의)

3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인재근 · 이은주 · 용혜인 · 이수진(비) · 박성준 · 서동용 · 이학영 · 김경만 · 이성만 · 주철현 · 박홍근 · 남인순 · 양이원영 의원 발의)

3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교홍 · 최기상 · 남인순 · 박홍근 · 우원식 · 임호선 · 양정숙 · 송영길 · 고용진 의원 발의)

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송옥주 · 박정 · 정준숙 · 양정숙 · 이상현 · 인재근 · 김경만 · 윤재갑 · 박성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2405)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남인순 · 박홍근 · 우원식 · 임호선 · 김경협 · 고용진 · 이해식 · 윤재갑 · 최인호 · 이장섭 · 이동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409)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남인순 · 박홍근 · 우원식 · 임호선 · 김경협 · 고용진 · 이동주 · 이해식 · 윤재갑 · 이장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413)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남인순 · 박홍근 · 우원식 · 임호선 · 김경협 · 고용진 · 기동민 · 윤재갑 · 최인호 · 이동주 의원 발의)

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송옥주 · 박정 · 정준숙 · 양정숙 · 이상현 · 인재근 · 김경만 · 윤재갑 · 박성준 · 이용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2475)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 · 신동근 · 문진석 · 김홍걸 · 민형배 · 안민석 · 기동민 · 김원이 · 김병기 · 황운하 · 김철민 · 송갑석 · 서영교 의원 발의)
4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 · 김병욱 · 신동근 · 안규백 · 안민석 · 윤관석 · 윤후덕 · 이용우 · 이정문 · 전용기 의원 발의)
4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 · 김병욱 · 신동근 · 안규백 · 안민석 · 윤관석 · 윤후덕 · 이용우 · 이정문 · 전용기 · 정일영 의원 발의)
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 · 김병욱 · 신동근 · 안규백 · 안민석 · 윤관석 · 윤후덕 · 이정문 · 전용기 · 정일영 의원 발의)
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 · 김영배 · 노웅래 · 맹성규 · 박상혁 · 박성준 · 박홍근 · 송영길 · 안규백 · 양이원영 · 윤관석 · 이탄희 · 이해식 · 전해숙 의원 발의)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최인호 · 이장섭 · 임호선 · 우원식 · 김교홍 · 고용진 · 신동근 · 홍익표 · 이동주 의원 발의)
4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 · 지성호 · 김예지 · 박대출 · 김기현 · 김석기 · 김승수 · 전주혜 · 이태규 · 김성원 · 김형동 의원 발의)
4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 · 이용빈 · 김홍걸 · 김종민 · 김민석 · 진성준 · 신동근 · 김병기 · 기동민 · 백혜련 · 허영 · 김윤덕 · 박성준 · 김경만 · 이용선 · 이장섭 · 김영호 · 김원이 의원 발의)
47.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박수영 · 김미애 · 유경준 · 안병길 · 윤창현 · 이주환 · 김은혜 · 김도읍 · 전봉민 · 황보승희 · 이달곤 · 조정태 · 장제원 · 김희곤 · 백종현 · 서병수 의원 발의)
4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 · 정성호 · 이용우 · 김정호 · 이은주 · 강은미 · 배진교 · 장혜영 · 류호정 · 양경숙 의원 발의)

4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임호선 · 김교홍 · 홍익표 · 이동주 · 전해철 · 이용선 · 신동근 · 고용진 · 권철승 · 최인호 · 윤관석 의원 발의)
5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 · 이상현 · 김민기 · 유동수 · 김정호 · 고용진 · 이원욱 · 신현영 · 김교홍 · 정춘숙 · 전제수 의원 발의)
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 · 홍문표 · 송석준 · 박덕흠 · 이명수 · 태영호 · 서일준 · 박대출 · 유경준 · 백종현 · 홍준표 의원 발의)
5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 · 이형석 · 신정훈 · 김경만 · 홍익표 · 강병원 · 이정문 · 송갑석 · 김철민 · 양정숙 · 임호선 · 이용빈 · 윤재갑 · 김성주 · 조오섭 · 권인숙 · 장경태 · 이해식 · 윤건영 의원 발의)
5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정성호 · 유동수 · 권철승 · 김승원 · 이해식 · 위성곤 · 홍성국 · 황운하 · 박성준 · 송옥주 · 송갑석 · 김경만 의원 발의)
5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 · 이용호 · 민형배 · 김민석 · 이장섭 · 김민철 · 한준호 · 안규백 · 김수홍 · 이해식 · 강득구 · 김철민 · 김두관 · 조정식 · 임종성 · 이수진(비) · 서영교 의원 발의)
5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 · 김승원 · 김경만 · 이은주 · 윤관석 · 노웅래 · 남인순 · 한준호 · 전용기 · 임종성 · 최종윤 의원 발의)
5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 · 소병훈 · 김영진 · 노웅래 · 김진표 · 진성준 · 김경만 · 윤준병 · 박성준 · 인재근 · 이인영 의

원 발의)

5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김정호 · 박재호 · 최인호 · 허영 · 김홍걸 · 고영인 · 이병훈 · 정춘숙 · 송옥주 의원 발의)

6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이용우 · 양향자 · 이용호 · 인재근 · 소병훈 · 설훈 · 윤재갑 · 김용민 · 조웅천 · 윤영찬 의원 발의)

6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최인호 · 박재호 · 이병훈 · 김병욱 · 허영 · 김정호 · 이장섭 · 송옥주 · 김홍걸 의원 발의)

6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양이원영 · 주철현 · 조오섭 · 김경만 · 박영순 · 홍성국 · 이수진(비) · 윤미향 · 김용민 · 남인순 의원 발의)

6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최인호 · 박재호 · 김정호 · 이병훈 · 김병욱 · 허영 · 이장섭 · 송옥주 · 김홍걸 의원 발의)

6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 · 인재근 · 서삼석 · 조정식 · 조오섭 · 이장섭 · 민형배 · 안민석 · 권칠승 · 이동주 · 정춘숙 의원 발의)

6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 · 인재근 · 서삼석 · 조정식 · 조오섭 · 이장섭 · 민형배 · 안민석 · 권칠승 · 이동주 · 정춘숙 의원 발의)

6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양정숙 · 전해숙 · 최종윤 · 김병욱 · 박정 · 박성준 · 윤재갑 · 이수진(비) · 강병원 · 김희재 · 김경만 의원 발의)

6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최인호 · 박재호 · 이병훈 · 허영 · 김정호 · 고영인 · 이장섭 · 김홍걸 · 김철민 의원 발의)

6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 · 윤준병 · 강선우 · 이인영 · 이형석 · 정청래 · 홍익표 · 최종윤 · 진선미 · 전해숙 의원 발의)

6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홍성국 · 강선우 · 강준현 · 김경만 · 김민석 · 김영배 · 김희재 · 남인순 · 박성준 · 박정 · 송재호 · 신정훈 · 양정숙 · 어기구 · 이용우 · 이원욱 · 장경태 · 황운하 의원 발의)

7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이원택 · 박성준 · 김승원 · 김경만 · 김민석 · 윤미향 · 양정숙 · 권칠승 · 김두관 의원 발의)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이수진(비) · 신정훈 · 이상직 · 김경만 · 김두관 · 양정숙 · 홍영표 · 이성만 · 김형동 의원 발의)

7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 · 김성환 · 김남국 · 장경태 · 이원욱 · 김원이 · 우원식 · 박홍근 · 윤준병 · 이용빈 · 정필모 · 이소영 · 용혜인 · 강득구 · 안호영 · 이해식 · 위성곤 · 김정호 · 김한정 · 김영배 · 양이원영 의원 발의)

7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홍성국 · 김민기 · 이형석 · 강선우 · 김영배 · 김경만 · 이상직 · 김민석 · 이성만 · 박성준 · 윤재갑 · 정태호 · 김희재 · 이수진(비) · 이원택 의원 발의)

7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 김희국 · 송언석 · 정희용 · 이용 · 김희곤 · 류성걸 · 추경호 · 정진석 · 김상훈 · 윤창현 · 양금희 · 윤두현 의원 발의)

7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 · 홍정민 · 김철민 · 유정주 · 김승남 · 박홍근 · 조오섭 · 김정호 · 신정훈 · 이수진(비) · 김병욱 · 고영인 · 이해식 · 양이원영 의원 발의)

7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 · 김승원 · 오영환 · 홍익표 · 김병욱 · 이형석 · 정청래 · 김종민 · 박용진 · 김용민 · 송갑석 · 장경태 의원 발의)

7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 · 권명호 · 최형두 · 김석기 · 김영식 · 박덕흠 · 송언석 · 이달곤 · 서범수 · 추경호 의원 발의)

78.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설훈·장철민·진선미·이재정·이장섭·우원식·박성준·강병원·김영배·민홍철 의원 발의)

7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김경만·이수진·박영순·최종윤·강훈식·이형석·김승원·정필모·이용우 의원 발의)

8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서삼석·오영환·정청래·강병원·송영길·허영·임오경·김용민·김종민·이장섭·김정호·박용진·안민석 의원 발의)

8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정청래·강병원·송영길·허영·임오경·김용민·김종민·이장섭·안민석·박용진·김정호 의원 발의)

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엄태영·유경준·안병길·이현승·이주환·홍영표·김교홍·홍준표·최승재 의원 발의)

83.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김희곤·태영호·정동만·강기윤·서범수·하영제·엄태영·이현승·전봉민·안병길·윤한홍·강민국·이주환·백종현·최승재·황보승희·김미애 의원 발의)

8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조오섭·양정숙·이형석·송갑석·신정훈·오영환·김남국·양향자·노웅래·윤미향·이용빈·윤영덕·정청래·서삼석·최종윤·민형배·전혜숙·김경만 의원 발의)

8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이용빈·송갑석·서삼석·전혜숙·양향자·이정문·이형석·강훈식·신정훈·강선우·김승남·이낙연·김성환·김회재·고영인·노웅래·강병원·신영대·윤영덕·문진석·홍정민·권철승·이장섭·민형배·강은미·박정·서동용·윤재갑·정태호·홍성국·이규민·김수홍·이병훈·우상호·박범계·김교홍·조오섭·전해철·김민기·서영교·윤미향·설훈·이원욱·황희·유동수·양정숙·장경태·양경숙·인재근·강

득구·소병철·김원이·남인순·진성준·한병도·주철현·이탄희·박광운·이학영·민병덕·정청래·김민석·안규백·윤영찬·이개호·김홍걸·송영길·김남국 의원 발의)

8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이용빈·이정문·이형석·강훈식·신정훈·강선우·김승남·고영인·강병원·윤영덕·민형배·윤재갑·서영교 의원 발의)

8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문진석·황운하·김윤덕·김원이·송갑석·김철민·민형배·이용빈·안민석 의원 발의)

8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윤주경·윤창현·태영호·이용·강대식·송언석·김기현·권성동·한무경·권명호·최승재·김희국·정경희·서범수·김미애·김상훈·윤두현·김예지·서병수·전주혜·서일준·엄태영·지성호·홍준표·유경준·조수진·김두관 의원 발의)

89. 군 휴가 중 폭행사건 관련 보훈혜택 부여에 관한 청원(문진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윤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8항까지 총 84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9항 청원 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7항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의원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남구갑 출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16인의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습니다. 11년이 지났지만 현행법은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최소한의 조항으로만 구성되

어 있어서 금융중심지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아주 한계가 많습니다.

현재 금융중심지는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설치나 금융회사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금융중심지의 내실화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개정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중심지를 금융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와 지방세 감면, 어린이집, 학교, 병원, 방송 등에 관한 규제 완화로 국제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자체장은 금융특구 구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금융특구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특구의 내실화와 특구 구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있는 법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한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의원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미증유의 경제 위기로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우리 금융권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환매가 중단되는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초년생, 은퇴한 노년층 등 금융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금융사고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운용사의 불법 운용, 관계기관의 관리 부실 등이 얹히면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연이은 금융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완전판매와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금융회사 대표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회사 대표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배 또는 10억 원 이하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철저한 주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발의된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구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품질을 제고하고 그간 행정규제기본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대상이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 생명, 국민 안전, 환경과 관련된 경우에는 규제 강

화뿐만 아니라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법안 검토·심의 과정에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9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신고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다단계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청이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1항과 제5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거래정보저장소 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크라우드펀딩 등 자산운용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거래정보저장소와 관련해 금융투자업자 등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게 되며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 정보를 금융 당국에 제공하고 관련 통계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거금을 교환토록 함으로써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가 감소할 것입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해서는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현재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일부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등이 금융위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7건의 경우 단순 신고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수리가 필요가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상호저축은행 해산·합병에 대한 심사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어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2건과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30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에게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규제가 쉽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폐지·완화 시 심사 대상이 되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제56항 김병욱 의원과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착오 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비대면 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에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포함시킬지 여부와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방식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외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경영 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수수료·보수 고지의무의 부과,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손해액 추정제도 등을 추

가하여 시행 전 법률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경영 제한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손해액 추정제도의 경우 자본시장법 조문을 이관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부칙을 통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총리령에서 구체화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6월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결정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7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8건입니다.

이 중 2쪽 의사일정 제15항 송갑석 의원안은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기술 자료로 인정함으로써 기술 자료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합리적 노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보호시스템을 구비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비밀관리성 요건 중 ‘합리적인 노력’을 삭제하게 되면 특별한 관리 노력 없이 기술 자료 보유자의 단순한 비밀 관리 의사만으로도 기술 자료로 인정되게 되어 기술 자료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됨에 따라 처벌 대상이 증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9건입니다. 이 중 7쪽 의사일정 제20항 유동수 의원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일정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절차법적 의무 위반행위들은 행위 질서 유지에 장애를 줄 수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무 태반으로 볼 수 있고 과태료는 행위의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관련 위반은 의무 부과 대상 확정해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 중 의사일정 제12항 이동주 의원안은 대리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리점사업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급업자에게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당한 영업 지역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과는 다른 대리점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상품 또는 용역 공급 중지 시 사전 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업 활동 자유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20쪽 하단—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의사일정 제75항 서동용 의원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근로기준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동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적발이 어렵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환철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12건과 청원 1건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7항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국가의 양로 및 양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가 합당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의 다양한 유형과 상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8항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은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순직군경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는 순직군경 외에도 전몰·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이 있으므로 순직군경의 날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을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과 제80항, 김홍걸 의원·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공적으로 취득한 국가유공자 지위 및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10·16 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제정안입니다.

다만 민주화운동은 부마민주항쟁과 함께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6·10 민주화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에 대해 공법단체로서의 위상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동 개정안은 유가족의 범위 및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자격에 형제자매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직계존비속

위주로 구성된 보훈단체 관련 법률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경우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과 추가 재정 소요액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8항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등록 심사 기한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결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과 전문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 소요 등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법안심사 1·2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할 순서입니다.

법안 설명을 듣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손을 들어서 대체토론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내놔는데 언뜻 보기에는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게 좋아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어떻게 하면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정부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예, 맞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것이 또 다른 규제가 되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굉장히 그래 보이는데?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과거에 규제를 완화해서 사고가 난 경우를 찾아보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2008년도에 천연물신약에 대해서 심사 기준 완화하고 나서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가지고 오히려 그 이후에, 2008년에 하고 나서 2016년도에 규제를 강화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작년에 모든 법안 중에서 규제가 완화된 법안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된 경우가 총 332건인데 저희들이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규제의 직접적인 목적이 국민의 안전·생명·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되는 것을 보니까 한 27건으로 해서 8.1% 정도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이게 규제의 목적 자체가 국민의 생명·안전인데 이것을 완화할 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다는 내용이고요.

한 8% 정도 적용된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과다하게 저희들이 적용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 운영 과정에서도 그런 점을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고요.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금융위에서도 계속해서 법안들이 올라오는데 결국은 네거티브 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변하는 시대의 금융 핀테크 산업을 어떻게, 매년 법으로 포함시킬 거예요? 1년에도 몇 번씩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포지티브 법을 네거티브 법으로 바꿀 수 있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예, 좋은 말씀, 맞습니다. 이게 계속 바뀌는 것을 다 규제를 리스트 할 수는 없고 최소한 이것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또……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을 이제 TF를 구

성하든지 해 가지고 네거티브 법으로 바꿀 수 있는, 몇몇 법은 그렇게 포괄적 네거티브 법으로 바꾼다고 하는 전제하에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적용된 다음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일련의 그런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원욱 위원** 그리고 권익위원장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가지고요.

올해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희망사항이고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욱 위원** 이게 일단 19대 말에 이른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방지, 이 두 가지가 포함됐었는데 거기에서 이해충돌 방지만 빠지고 부정청탁 금지만 포함돼서 법안이 통과되고 20대에 4년 동안 발의가 되어 있었는데 놀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필요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금 박덕흠 의원 문제라든가 추미애 장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권익위원회에서 해석을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애초에 발생할 소지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지금 현재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이해관계인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사전 신고할 수 있다, 이 근거 규정만 있고요. 그래서 흔히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는 현재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행동강령상의 개념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가장 최종적인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언론이나 많은 데서 지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는 이해충돌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 재판의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법원이나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실제로 이해관계인이 사실 확인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협조를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에 당사자나 아니면 또 추 장관의 경우에 법원이나 검찰이 일종의 이해관계인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3의 기관인 권익위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줄이고 또 사전에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공직자의 경우에 사전에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둔다면 이해충돌 여부라는 이런 불분명한 개념으로 사회적 혼란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욱 위원** 그래서 우리 정무위원회 여당·야당 위원님들한테 권익위에서 직접 다니면서 법의 필요성을 보다 더 심도 깊게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서 정부가 이 법의 통과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서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이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대체토론을 먼저 하시고 혹시 또 다른 게 있으면 이것 끝나고 저희가 여야 간사 간에 얘기를 해서 몇 분 의견을 듣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용진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윤관석** 법안 대체토론이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 권익위원장님, 이원욱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 이해충돌과 관련된 논의에서 주무부처의, 권익위가 주무부처인데 주무부처의 장께서 확고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 주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께서도 여야 위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법이 애초에 김영란법 제정당시에 빠졌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비난

했고 국회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이런 법에 저해될까 봐서 이런 것 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논지였거든요.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회 보면서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 그런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대로 된 법안 논의, 제대로 된 제도개선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방해하는 것 아니냐,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국회에서 법을 잘 만들어 주시면 잘 하겠다’ 이렇게 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위에서의 박덕흠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도 관련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그렇게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법 개정에 대한 의지,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여 주셔야 돼요. 그 말씀 당부드리려고 제가 발언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현재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공청회나 또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회에서 이해충돌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혹시나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침해가 된다는지 좀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입법부의 기본적인 권능은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드시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그리고 논란을 빚고 있는 대부분의 이해충돌 그런 사안들은 원론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소지가 있다 이런 식의 논의가 많이 진

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명백하게 이해충돌에 관한 규정이나 또 근거, 방법, 요건 이런 부분에 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이해충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규범성을 가지고 사전에 이해충돌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또 법령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하더라도 요건에 구비되는지 엄격한 실체, 구체적인 그런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파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규범력을 가지고 한다면 보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국민들과 또 국회의원님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박용진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는 법이 제정되고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의 청탁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청렴도 전체를 높이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그때 빠지게 됐었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이해충돌 방지법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현재의 국력과 또 세계적인 위상을 보았을 때 그리고 또 국가적인 반부패, 청렴 그런 의지를 봤을 때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번 국회 때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법안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서면질의를 해 오신 위원님들이 있는데요,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서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외에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몇 분 신청하신 분을 지명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을 들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위원** (손을 듭)

○**위원장 윤관석** 윤재옥 위원님.

○**윤재옥 위원** 보훈처 차장님 나오셨나요?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안 왔습니다. 오늘 인원이 제한돼서……

○**윤재옥 위원** 오늘 출석 대상이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예.

○**윤재옥 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전달 좀 하십시오.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예.

○**윤재옥 위원** 이 양반 보니까 보훈처 차장 오자마자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문제에 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처장님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사실상 이분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하면서 휴가 관련해서 행정적인 실무 총책임자예요. 장관이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휴가 기록도 없고 또 휴가 기간도 인사명령 내용에 또 부대 일지, 면담 기록, 복무 기록에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논란의 핵심이고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숙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본인 말대로 지금 자리를 옮겨서 관여할 일도 아니라고 본인도 스스로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황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어라든지 내용이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 용어를 보면 ‘쌍팔년도 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석한다’는 등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니, 쌍팔년도 공직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차관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의견을 올립니까? 본인 잘못이 작지 않은 본인데도 불구하고 자성하기는커녕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뛰한다고 같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 사안에 왜 나섭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께서 제 입장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

해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처신에 유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다음,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은성수** 예, 말씀하십시오.

○**윤재옥 위원** 뉴딜펀드 이거 원금 보장합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펀드는 원금 보장을 저희가 사전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첫 브리핑에서 설명을 하실 때 원금에다가 3% 정도 이율을 준다고 그랬다가 또 조금 이따가는 35% 정도 후순위출자 정도로 보전이 된다고 했다가 또 정부의 뉴딜펀드 손실 부담 비율이 10%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예산 사업으로는 10%를 기본적으로 출자를 하는 게 맞고요. 제가 35% 이야기를 한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10%를 깔고, 평균적입니다, 이것은. 펀드마다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산업은행하고 성장금융펀드가 35%, 20조의 7조니까 35%, 합치면.

그래서 평균적으로 35%가 자기 밑으로 깔리니까, 중순위나 중 이렇게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순위니까 선순위 입장에서는 35% 손실 날 때까지 나한테 손실이 오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35%까지는 방어, 프로텍트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윤재옥 위원** 어쨌든 위원장님이 최초 브리핑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가지고 출범도 하기 전에 시장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이 펀드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게 사실 유례가 없던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밀하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좀 가려서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장의 혼란을 어떻게 막을 생각이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출자자 입장과 투자자 입장을 조금 다른 앵글에서 본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나고 나니까 10%와 35% 두 가지만 남아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 그 뒤에 해명한다고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다음부터 설명할 때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성일종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전현희 위원장님,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해충돌에 대해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충돌을 대비하고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행동강령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맞습니다.

○성일종 위원 맞습니다. 방금 전에 ‘행동강령에 사전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맞습니다.

○성일종 위원 자, 그런데 추미애 장관 관련과 관련해서 권익위가……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로 문의를 했어요, 검찰에 접수된 법무부장관의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하였는지 여부. 이것을 왜 그쪽에서 물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걸 왜 묻습니까?

두 번째, 또 법무부장관은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행사했는지를 검찰총장한테 물었거든요? 이것을 권익위가 왜 묻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답변드릴까요?

○성일종 위원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해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에 관한 제5조 위반 여부에 관해서 이해충돌과 유사한 조항으로 법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성일종 위원 아니, 짧게……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물었느냐고만 묻는 거거든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지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나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의 해석이 가장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성일종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또, 주도권 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법무부장관으로 아들 수사받는 것에 대해서 직무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권익위에서 이쪽으로, 검찰로 물어 가지고 답변을 했거나 지휘권을 행사했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면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해충돌에 대해서, 박덕흠 의원도 헌법기관이에요, 권익위로 질의를, 물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권익위도 똑같이 박덕흠 의원한테 물어 가지고 박덕흠 의원이 이런 직무관련성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이것도 ‘없다’라고 의견 내실 겁니까? 똑같은 사안이에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나 검찰에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 지휘권을 행사한 여부를 질의한 이유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어야 거기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권익위의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냥 이런 정도로 답변해 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 개인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법무부와 검찰의……

○성일종 위원 위원장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조희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제도적인 한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빙성이 있고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을 하려면 권익위에 조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성일종 위원 그러면 박은정 위원장은 조국 장

관 사건을 다룰 때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왜 서류로 이런 것을 안 물었습니까, 같은 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당시 권익위의 회신을 보면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거나 또 보고를 받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권익위에서 회신을 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당시의 전임 위원장은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그러하였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도 만약에 일반론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느냐 그럴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해충돌 행위에 관련된 그런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 있으나 그런 답변은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하고 박은정 장관 때 이것을 답변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제대로 못 보고 계시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아닙니다. 지금 제가 당시 전임 위원장의 답변 회의록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답변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답변을 했고요.

○**성일종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 서면답변으로 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라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그래서……

○**성일종 위원**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의 이야기대로 그렇게 가면 범죄 혐의자한테 ‘너, 범죄 혐의를 한 것 있느냐?’라고 묻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위원장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왜 중요한가. 미래에 발생할 이해의 충돌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1분만 제가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예, 간사님이니까 특별히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성일종 위원** 아니, 앞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묻는 것인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지휘권·인사권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건데 본인한테 묻거나 기관한테 물어 가지고 ‘없다’고 하는 대답 한다고 그러면 권익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법무부장관의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수사를 받는 경우에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경우에는 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원론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않았습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이해충돌이 되느냐 이런 사안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질문을 해 주신 거고요. 그렇다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익위의 그동안의 유권해석 원칙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일종 위원** 지금 권익위원장이 권익위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해충돌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판단을 해 주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맞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저지른 그 기관한테, 조사하고 있는 기관한테 사실관계, 앞

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고받았냐고 물어보고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권익위 직원들을 어떻게 보시려고 그래요?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님의 그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서 이런 상황이, 특히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파악을 위해서 구체적 지휘권이나 아니면 구체적 업무를 한 부분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요.

○위원장 윤관석 마무리 답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하는 그런 신고제도가 규범력을 발휘해서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다른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다음에 박용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또 윤두현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국가보훈처장님!

요즘에 국가보훈처를 보면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대정부질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다루어지고 그런데 이런 프레임을 우리 정무위까지, 상임위까지 가지고 오지 않으려고 우리 여야 위원님들, 국회의원님들도 서로 조심을 하고 하는데 국가보훈처의 차장님이 여기에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어요.

국가보훈처가 지금 뭐 하는 데지요? 저는 국가보훈처만큼 하는 역할과 대한민국의 국격과 직결된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가보훈처는 계속 정쟁에, 그것도 한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처장님, 지금 차장 밖에 대기하고 계시나요?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예, 제가 들어올 때 그렇게……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국감 때 아니고 지금 불러도 됩니까?

○위원장 윤관석 예, 기관증인이라…… 기관증인입니다.

○강민국 위원 저기 서도록 해 주십시오. 불러 주시지요. 내가 질의를……

○위원장 윤관석 그것은 이후에 좀 협의를 하시고, 지금 증인 형태로 부르기에는 우리가 숫자를 딱 맞춰서 방역하고 있고 또 오늘은 법안 대체토론하면서 의견 받는 거니까……

○강민국 위원 아니, 간사 협의 안 되는 거였으면 시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관석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처장님, 처장님도 다 업무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금 이 부분을?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국가보훈처 차장이라는 분이, SNS에 물론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휴가 연장하는 것은 특별한 일 아니다’라고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데 일선장병들이 전부 다 ‘나도 감기만 걸리면 전화로 휴가 연장한다’는 이런……

국방부도 아니고 다른 위원회, 국가보훈처의 차장이 지금 우리 정무위에 이런 논란의 불을 지펴야 되겠어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NS상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차장하고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2014년도에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이런 등등의 병력 관리 부실로 인한 여러 가지 대형 사고가 나서 국방부에서 병력 관리의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이렇게 했고, 3년여 동안 인사복지실장을 하면서 그 실무를 담당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인들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 온 것에 대해서 개인 SNS상에 올린 건데 이 일이 이렇게 파급이 크게 될지 몰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강민국 위원 아니, 국가보훈처의 차장님이 지금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고 우리 정무위에 이런 불을 질러 대나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고.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예, 그래서……

○강민국 위원 거기다가 이분이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할 때도 우리 군 내에 휴대폰 사용 전면 허용하고, 그분이시네요, 보니까.

요즘에 SNS…… 차량 보면 우리 군인들이, 장병들이 이동할 때 전부 다 휴대폰만 보고 있다. 이런 사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것 중의 하나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보훈처는 1961년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서…… 이 목적이 됩니까? 국가의 유공자,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참전 군인과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보훈처 차장이라는 분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이해가 가요, 처장님도?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위원님, 그래서 제가 우리 일에 집중하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일에 집중하자고 얘기를 했고 또 본인도 금방, 바로 후회를 하고……

○강민국 위원 아니, 처장님!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이 조직과 저 조직에 대해서 어떤 적절치 못한 그런……

○강민국 위원 이분은 지금 군인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으로 인사복지실장까지 가신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맞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분은 지금 하는 여러 가지의 행태를 보면 공무원이 아니고 정치를 하실 분 같은데 국가보훈처 차장에서 업무를 배제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그것은 임명권자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강민국 위원 보훈처장이 왜 그것 통할이 안 됩니까, 밑의 직원이신데?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저희 보훈처 업무는 잘 의논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저는 보훈처장님이 보훈 차장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제가 그 부분은 잘 얘기해서 잘 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민국 위원 업무 배제까지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내가 보기에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정치하실 분이죠.

앞으로 국가보훈처의 원목적에 맞게끔 처장님의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구윤철 장관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창원 지금……

○박용진 위원 어디 가셨네요.

저희 의원실에서 위험 물질 관리와 관련해서 자료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취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창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은성수 예, 말씀하시지요.

○박용진 위원 예결위 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이는 한데요.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 관련해서 혹시 검토해 보실 시간 있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아니요, 지금 실무자들은 쪽 읽어 봤고요 저도 뭐 조금 봤는데 제가 직접 공소장을 본 적은 없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세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예.

○박용진 위원 좀 많기는 한데 위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실무자들도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그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범죄행위들은 범죄행위들대로 있고요 또 우리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규제 당국으로서 감시·감독 역할을 충실히 했어야 되고 그때 혹시 놓쳤더라도 지금이라도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 진행하실 의사는 있으신 거지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그래서 취지는 저도 정확히 이해를 했고요. 우선 사실관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해서 기소했던 거고. 그런데 일단은 그 안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처벌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또 빠진 게 있는가를 짚 하는 것은 하는 거고.

다만 저희가 행정관청으로서 생각……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법원의 판결은 또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소만으로 모든 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안은 들고 있다가 법원에서 확정판결 나오면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준비는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법원의 확정판결 나오기 전에 먼저 저희가 앞서 나가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박용진 위원 아니, 기소도 안 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확정판결을 해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박용진 위원 제 말씀은요 기소가 된 사안들이 있고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 사건이 있을 때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5년 동안 시장에서 그렇게 경고가 있고 국회에서 5년 동안 의원들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님, 그것 조사하셔야지요’ 할 때마다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쪽에 계속 디펜스를 하시던 역할을 하다가 이제 또 5년 뒤까지 기다린다고, 이 재판 끝날 때까지?

○금융위원장 은성수 아니요, 위원님. 다시 한번 정확히 이야기……

○박용진 위원 아니, 이러시면 안 된단니까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아니아니, 잠깐요 위원님.

○박용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냥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가 역할을 하시면 될 문제들 아니겠어요, 제 역할을?

○금융위원장 은성수 그러니까요 위원님, 제가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한대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용진 위원 이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아니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검찰이 기소를 했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금융위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후속 조치를 하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아니면……

○박용진 위원 공소장 읽어 보시면 검찰이 범죄행위로 적시해서 기소한 것이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10개 정도의 위반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소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로 처벌할 것이 있고 행정 당국이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처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금융위원회를 나무라고 이럴 게 아니고요. 예

전에 그렇게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것 가슴 아르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찰에 협조 요청해서 자료 받아다가 확인하시면 금방 끝날 문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삼성…… 거기 보면 기소는 되지 않았습시다만 삼성물산이 삼성증권에 자기 주주들 정보 제공해 가지고요 그 주주들에게 찬성표 이끌어 내도록 삼성증권이 역할을 합니다. 그것 기소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법 위반인 건 맞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위원님, 공소장을 보고 판단을 하겠는데요, 형태는요……

○박용진 위원 그러면 분명히 얘기하시지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아니요, 위원님……

○박용진 위원 분명히 얘기하자고요. 제가 30초 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공소장 검토하시고요. 그래서 기소된 건 기소된 것대로, 기소되지 않은 건 기소되지 않은 것대로 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해야 될 역할들을 자료 검토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그렇지요.

○박용진 위원 그리고 혹시……

○금융위원장 은성수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박용진 위원 금감원에서 삼성증권사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했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와 관련해서 혹시 금융위가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하신 적 있어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저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여기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돌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왜냐하면 관련 기사가 나오고 나서 거의 빛의 속도로 부인하는 보도자료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상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 예, 그것은……

○박용진 위원 그것도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은성수 예.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는 행정관청이고 수사는 검찰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필요한 자료가 있고 검찰이 수사하면 저희 자료는 다 검찰에 주는데 수사한 검찰의 기록이 저희 쪽으로 돌려져 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수사한 것을. 우리가 공소장만 현재 있는 건데 기록을 줄 건지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요. 위원님은 지금 검찰은 다 알고 있는데 금융위는 왜 안 하느냐고 하지만 거기는 수사기관이고 저희는 행정기관이라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셔서, 저희가 안 하려고 피해 다니고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삼성증권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런…… 저희하고 금감원 입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감원도 다 조직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금방 다 드러날 것을 하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박용진 위원 공소장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현 위원 보훈처장께 잠시 묻겠습니다.

보훈차장이 말 잘 안 들어요?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예?

○윤두현 위원 보훈처장 지시 잘 안 들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잘 들습니다.

○윤두현 위원 그런데 왜 말했는데, 뭐 이야기는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왜 합니까? 페이스북에 올려 가지고 그걸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그 일이 끝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안 하겠다고 이렇게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것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

다. 그것 적절치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윤두현 위원 제가 아까 전에 강민국 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고, 이걸 질의하는데 답변을 들어 보면 제 귀에 잘못 들렸을지는 모르겠는데 보훈차장이 말을 안 듣는다, 지시를 안 듣는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훈처장께서 좀 책임 있는 행동이나 자세를 보여 주셔 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것에 대한 본인의 최소한의 해명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위원님, 제가……

세 번을 올렸는데 마지막에 올린 것은 이 글로 인해서 그런 오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과급효과가 클 줄 몰랐다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전 조직과 현 조직에 누를 끼치게 되고 한 이런 부분도 별로 그렇게…… 미안하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렇게 다 올리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활동을 일단 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제가 확실하게…… 위원님,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듣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통제를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두현 위원 보훈 차장이 자기가 그럴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면 판단력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훈 차장이 몰랐다는 얘기가 과연 가능할까요?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윤두현 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말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권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권익위는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윤두현 위원 지금 그날 당직 사병, 현 모 당직 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시다.

그런데 권익위가 신고자인지 이렇게 보호하는 법안 중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있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에도 그 규정이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윤두현 위원 지금 권익위는 검찰에 묻고 이러는 과정에 있다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 현 모 당시 당직 사병의 신변이 노출되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위협을 느낀다고 언론에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권익위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당직 사병을 보호하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권익위는 말씀대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사실상 신문고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진 국민들이 와서 최종적으로 나라에 도와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또 신변 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권익위의 신변 보호나 신고자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어야 부득이하게 법상으로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윤두현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잘 알겠고, 저도 시간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이게 사후에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일을 못 하게 막는 방법은 뭐냐? 사후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해당되었을 때 그 전에 그 당직 사병 등 신고자·협조자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한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면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안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한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윤두현 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관석 다음은 민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김한정 위원 예.

○위원장 윤관석 민병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민병덕 위원 권익위원장님, 이해충돌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적인 이해와 공적인 지위가 충돌하는 것을 말하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민병덕 위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전 회피해야 된다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지금 현재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이해충돌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전에 회피하라는 것이잖아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민병덕 위원 그렇지요?

이해충돌 상황을 볼 때 사적인 이해관계하고 직무관련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민병덕 위원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아들이기 때문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법무부장관의 직무 관련이라는 것은 아들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직무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민병덕 위원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아들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한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그런……

○민병덕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서 쟁점이 뭐냐 하면 이런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쟁점 아닙니까?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무원이 회피를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조사한 것 아닌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렇다면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도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조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답변을 좀……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항상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경우에 어떻게 사전에 회피하거나 사후에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현재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조국 전 장관과 그리고 추미애 현 장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박덕흠 의원의 사례의 경우에 이해충돌 여부와 사전 회피, 사후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권익위 법에 관련되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려면 이해관계인이고 또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이 부분에 이해관계인과 직무관련성 요건이 충족할 때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요. 그럴 때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의 지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해충돌이다 이게 권익위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면 세 분의 사안도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임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지위,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 답변을 드린 거고요. 현 추미애 장관은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그럴 경우에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부까지 확인을 한 거고요. 박덕흠 의원의 사례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그런 언론 보도만으로 볼 때는 이해관계인의 지위에는 있을 수는 있다,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그런 행위를 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사안 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권익위의 유권해석 원칙에 따라서 이해충돌 여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했지만 여전히, 아까 존경하는 성일중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민병덕 위원**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와 수사를 보고받는 것이 업무 관련성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충돌 상황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병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명확한 대답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정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관석** 다음 질의가 이어지기……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아, 한 가지 더……

○**위원장 윤관석** 답변 있으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윤관석** 간단하게……

○**김한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게……

○**위원장 윤관석** 잠깐만요, 답변 남았으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행정부의 공무원에 한정된다는 것이 저희 해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잠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아까부터 해 가지고……

김한정 위원님.

○**김한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의사일정에 없는 사실상 현안질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윤관석** 지금 많이들 발언하셔서 그렇게 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한정 위원** 상임위가 열렸을 때 현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관련 부처의 책임자분들께 질문하고 답변 듣는 것은 좋습니다. 또 필요한 일인데 이렇게 준비 안 된 의사일정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계속하게 되면……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냉정히 말해서 오늘 안전과 상관없이 의무가 없는 다른 기관장들이 여기에 앉아 있어야 돼요.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밖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국정 낭비입니다. 업무 방해예요, 사실상 냉정히 말해서. 이분들이 필요 없이 앉아 있게 만드는 속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할 시간을 우리가 뺏는 결과도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안질의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서 박덕흠 이야기 안 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또 부처에서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속에서 나와서 정치 공세처럼 해 버리면 이 상임위가 생산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차제에 의사일정 관리에 조금 더 유념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같이 우리 국정이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관련 공직자들을 붙잡아 놓고 시간 낭비하는 국회 관행은 이제 좀 극복을 합시다 하는 취지에서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유의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관석**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유의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의동 위원** 예.

○**위원장 윤관석** 의사진행발언 유의동 위원까지만 듣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기존에 질의 신청하신 분 한 분씩만 더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원래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대체토론 때 또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간사간에 협의·합의를 통해서 몇 분 끝나고 나서 질의를 받기로 했는데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질의가 또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고지를 드리려고요.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관한 유감 표명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일견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을 이 자리에 모셔 놓고 어떤 질의가 되었든 국가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것을 업무 방해라든지 시간 낭비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시면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너무 자학적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오히려 이런 자리가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하는 국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기도 얼마나 어렵

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시간을 더 활성화하고 이 과정 속에서 위원들과 국무위원들 간에 대화가 오고가면서 그간에 국민들께서 갖고 계셨던 오해나 의혹 이런 것들이 생산적으로 해소되고 또 다른 대안을 만드는 데는 아주 이런 자리가 없을 것이고, 특히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해충돌이라는 부분이…… 19대 때부터 이 논의가 되어 왔습시다만 개념 정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해충돌을 아주 협의로 할 것인지 광의로 할 것인지, 그러면 이 협의와 광의 사이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데 오늘 차제에 이런 좋은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앞으로 입법을 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두지 마시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감사합니다.

질의 한 분씩 더 받고 여야 간사님들 끝나기 전에 1분씩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자리에 안 계시네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창원** 예, 오늘 주례회 동 보고가 있어서 잠시 이석을 하셨습니다.

○**이영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보고서 하나를 발표한 것뿐인데 지금 현재 적폐로 몰려 있습니다. 사실 행정권력가가 지금 학자한테 재갈을 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원이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창원** 조세재정연구원이 이것에 대한 연구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판단하에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해야 될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을 뽑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지금 모아서 해야 될 일들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가진 행정가가 이런 식으로 위축되게 연구원들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관부서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 아

납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창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들을 표명하신 것이고 또 기관 차원에서 그렇게 연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서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호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9월 16일자로 연구 관련 소명 자료까지 만들었어요.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소명 자료를 지금 배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게요. 이것 배포해도 됩니까? 하게 하실 것입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창원 그 내용은 아무튼 저희가 정확하게 소명 자료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은 그 기관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기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것 배포하려고 하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실 것 이고요. 그다음에 위의 주관 부서잖아요, 보호해야 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창원 예.

○이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기초를 안 갖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창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연구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판단을 해서 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조세재정연구원 자체의 문제이고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연구 전문가 영역의 밖에서 다루어지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압력이나 이슈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지켜보겠다, 이것이 국무조정실의 입장이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창원 조세재정연구원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세재정연구원이 그것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 민형배 위원하고 유동수 위원, 두 분 중에 한 분만 발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이 먼저 해서 유동수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빨리 잘라서……

○유동수 위원 저는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보통 1분 한다 그러고 몇 번이나 하시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1분만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위원장 윤관석 1분 내로 해 주세요.

○유동수 위원 권익위원장님, 조국 장관 때 박은정 위원장과 이번에 추 장관 관련한 권익위 입장이 좀 달랐잖아요. 그리고 추 장관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내려도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유동수 위원 전에 조국 장관 관련한 권익위의 입장과 이번에 추 장관 관련한 입장이 다른데, 그리고 권익위에서 그런 입장을 내도 그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고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현 장관의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있으신데요.

○유동수 위원 또 하나는 박덕흠 의원 관련해서도 앞으로 권익위가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권익위의 이 사건 유권해석은 양자가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의 사적인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여기에서 공무원은 법무부장관으로 특정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에 구체적 수사지휘권이나 보고를 받는다면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그것은 이해관계자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 경우에는 이해충돌이다 이것이 권익위의 유권해석입니다, 양자에 적용되는.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셔서 대충 다 아시는데 결국 이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는 것은 권익위에서 직접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윤관석 유동수 위원님 육성으로 하시고요.

어차피 또 법안 심사를 하니까……

○유동수 위원 제가 발언하면 30초도 안 됩니다. 제 발언시간이 30초도 안 되거든요.

○위원장 윤관석 예?

○유동수 위원 제 발언시간이 30초도 안 되거든요.

○위원장 윤관석 아, 그래요?

○성일종 위원 유동수 위원은 워낙 훌륭하시니까 주시지요.

○위원장 윤관석 대신 민형배 위원님 차감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저 30초만.

○위원장 윤관석 1분 넣어 주세요.

○유동수 위원 결국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없고 그다음에 권익위에 직접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지금 이 사안에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검찰에 왜 사실 확인 절차를 했느냐 이런 논란이 또 일부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을 수 있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답변이 온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신빙성과 또 국민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려면 권익위에 조사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객관적인 제3기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립성을 가지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덕흠 의원 사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결의를 해 주셨는데요, 똑같은 원칙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지위가 있는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두 가지의 요건을 구비했는지가 사실 확인이 되어야 이해충돌이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권익위의 행동강령상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관석 다음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민형배 위원 공직자에게는 이해충돌 방지 의

무가 있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민형배 위원 그리고 그것은 공직자윤리법 2조의2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까 조국 장관의 경우 ‘가족이라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하고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 ‘가족인데도 직무 관련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하고 그것이 좀 다른가요, 같은가요? 권익위의 답변은 달랐는데.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유권해석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과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 구비를 확인해서 이해충돌 여부를 답을 드려야 하는데 ‘전직 장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위치만 확인하고 그럴 경우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조국 장관과 지금 추미애 장관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전직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가능성인, 일반론적인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권익위의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했으면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똑같이 이해관계자는 맞지만 직무 관련자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입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런 답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저기 한번 보여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도 두 번 직무 관련자 여부를 확인하셨고 검찰청에도 확인하셨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검찰청에서는 저렇게 답이 왔어요. ‘아니다’, 분명하게.

법무부는 왜 답을 안 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법무부에는 수차례 협조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이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을까요, 법무

부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그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게 추미애 장관이 직무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하는 것 자체가 직무 관련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안 한 것 아닌가요, 혹시?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대검에서 검찰총장 명의의 직인이 찍혀서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법무부장관이 행사한 적이 없고 또 검찰에서도 법무부에 수사에 관련된 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오늘로 해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정리를 해 줘 보세요. 아까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도 잘 안 돼요, 정확하게 정리가.

추미애·조국, 두 분 장관의 경우와 박덕흠 의원의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이해관계인과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할 경우에 이해충돌이다 이 원칙은 세 가지 사안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바뀌거나 해석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그 사안에 해당하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전임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민형배 위원**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이해관계인 여부만 확인이 되고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요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두 가지 요건을 다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정리를 좀 하셔서 발표를 공식적으로 해 주시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민형배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경인사연

이사님 안 계시지요?

지역화폐 연구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연구 대상 시기가, 이것은 연구자들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친 건데 연구 대상 시기가 지역화폐가 활성화가 되기 이전인, 그러니까 2018년 이전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보편화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또 하나는 연구보고서를 아직 공식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표를 안 했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윤관석** 예, 마무리하십시오.

○**민형배 위원**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브리프에다 먼저 냈어요. 이것은 이 절차나 과정이나 무슨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이 결과를 정리해서 가지고, 조사를 직접 하셔서 의원실로 결과를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창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관석** 위원님들의 의견과 질의를 간단히 들으려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김한정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사실은 현안질의를 할 거면 정리를 해서 사전에 안건 공개하고 또 위원님들과 기관도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유의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또 운영할 때 약간의 묘가 필요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정무위에 최근에 집중되는 것도 있고 해서 약간씩의 몇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는 걸로 여야 간사 간에 사전에 합의해서 진행했는데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안질의가 정확히 되지 않을 때는 자료까지 동원해서 질의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 현안질의가 되니까 앞으로 슬기롭게 잘, 하시고 싶은 말 하시면서도 성격에 맞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분만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간사님, 잠깐만 앞으로……

○**김한정 위원**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킵시다. 롤

을 가지고 해야지. 축구하자 해 놓고 야구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윤관석 마무리하기 전에 여야 간사님들 1분씩 하실 텐데 먼저 윤창현 위원님 신상발언이 있다고 해서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윤창현 위원 저의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아마 저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또 사임까지 이야기를 해서 가지고 오늘 부득이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장 150페이지가 여기 있는데요, 이 안에 제 이름 안 나옵니다, 일단. 그리고 이 공소장이 작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고 저도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여러 번 불렀고 사외이사들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고 새벽까지 저에 대해서 신상에 관련된 다양한 것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저는 피의자로 전환되지도 않았고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안 나오고 저에 대한 이야기가 딱,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공소장 45쪽 딱 네 줄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과, 사내이사들이지요, 출석 사외이사 3명에게 합리적 판단을 위한 자료나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허위의 설명 자료를 제공하여’ 이렇게 해서 피고인들에게 죄를 묻고 있고, ‘합병 계약 안건을 승인하도록 하였고’ 이렇게 해서 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이 네 줄을 통해서 다 끝났는데 여기에 어떤 부분이 범죄라는 이야기입니까? 만일 정말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죄를 지었고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고 제가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었겠지요, 당연히.

그리고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정무위와 연관된 기업이나 단체, 비상근 사외이사가 아니라 상근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분도 이해충돌은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무위 전체에 대해서 논의를 확대해야 할 것이고, 삼성에 대해서 긍정적 판단을 할 여지가 있으면 이해충돌이고 혹시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없다고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또 하나, 기관에 대해서도 성명까지 나왔는데 한국금융연구원은 민간 사단법인이라서 회원들 출연되는 돈으로 운영되므로 문제가 없고요. 실

제로 저보다 먼저 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동걸 현 산업은행장도 금융연구원장 시절에 LG텔레콤 사외이사를 겸직하셨고, 또 제가 공적자금위원장을 했는데 전 공적자금위원장 박영석 교수, 현 위원장 송의영 교수, 다 지금 사외이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없이 잘 이런 부분이 정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입장 하나도 확인도 안 하시고, 들어 보지도 않으시고 소통관에 가서—저랑 소통을 안 하시고—일방적으로 공격과 비판을 퍼부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5년 전에 합병 건에 찬성했다는 이유 하나로 오너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좀 저한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삼성물산 사외이사직을 수행한 분 중에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도 계십니다.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참여정부 시절 고용비서관 역임하시고 얼마 전 임기가 종료되셨는데 이분도 제일모직(구 삼성물산)의 사외이사직, 정확히 하면 제일모직 사외이사직을 수행하시면서 합병에 찬성을 하셨고 그리고 합병이 되고 나서 새로운 삼성물산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도 합병에 찬성을 했으니까 삼성과 유착 관계 운운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이해충돌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런 이해충돌 문제를 좀 더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잘 정리를 한 후에 전체적으로 공평성을 가지고 비판을 해 주셔야지 그냥 저 하나 딱 찍어 가지고 다 만들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하면 제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위원이기 전에 사람이고 또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이렇게 저를 딱 찍어 가지고서 ‘네가 했던 모든 것은 다 잘못됐고 네가 가진 생각은 다 유착 관계이고’, 이렇게만 이야기 해 주시면 제가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적 정쟁보다는 정책 대결을 통해서 좀 더 협치에 가깝게 가시는 쪽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에 대한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묻고 늘어지기 식으로 가시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좀 여쭙고 싶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 저의 신상발언을 했

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윤관석 신상발언 하니까 또 여당에서 발언권 신청했는데 아까 합의한 대로 일단…… 박용진 위원님 잠깐 내려 주시고요.

김병욱 간사께서 어차피 마무리 발언할 때 다 포함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주시지요.

○박용진 위원 아니, 죄송한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근거 없이 남을, 동료 위원을 헐뜯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관석 잠깐만 먼저, 박용진 위원님 조금만……

○김한정 위원 그러니까 회의 운영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왜, 윤 위원께서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는데 왜 저런 답변을 하시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그 이유를 저도 들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왜 회의 운영을 이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윤관석 예, 김병욱 간사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김한정 위원 그래서 왜 윤 위원님께서 저런 이야기를 하게끔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 발언 좀 해 주세요.

○박용진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나는 답답해서 못 살겠어. 무슨 이런 회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관석 김병욱 간사님 이야기하세요.

○김병욱 위원 예, 잠깐만요.

○김한정 위원 왜 일방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의제 설정을 함부로 해 가지고 회의를 이렇게 불균형하게 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잘 챙겨 주세요.

○위원장 윤관석 예.

간사님 먼저 말씀……

○김병욱 위원 오늘 2020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참 뜻깊은 날에 또 피감 기관 기관장님들, 위원님들 모여서 현안질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원래 여야 간사 끼리는 아주 소수로 한 두세 명 정도 하는 걸로 서로 합의를 했는데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워낙 우리 정무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그런 결과가 너무 과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회의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간사 간의

합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그 합의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아까 이해충돌 관련해서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 연관성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해충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전 예방인데 지금 그렇게 권익위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후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적 이해관계는 사전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직무 연관성은 사후적으로밖에 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해충돌을 규정짓는 데 있어서 반쪽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회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더 넓게 해석됨으로 인해서, 이해충돌을 너무 넓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권익위의 해석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또한 우리가 이해충돌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지적도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좀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하는지 여부를 당사자가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김병욱 위원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이상 현재는 해석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사자가, 내가 있는 위치가 이해관계인인데 사적 직무관련성이 있을까 없을까 여부를 고민을 안 하거나 그것 관련된 일을 안 할 테니까 직무관련성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해관계인 지위만으로도 사전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전에 이것 관련해서 일을 하지 않을 거야 하고 회피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경우에 직무관련성이 없을 때에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사후에, 미래에 발생했을 때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에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사실상 사전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차제에 또 처음부터 이해관계인 지위의 경우에 직무관련성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좀 구체적인 규정을 둔다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욱 위원** 좀 더 깊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 아까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직자윤리법에는 해당되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김병욱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관련된 이해충돌이 완전한 개념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부정한 재산 증식이라는 것이 가장 공직자윤리법의 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법률인지 그것은 별도로 봐야 되겠지만 국회의원의 이해상충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걸끄러워서 그렇게 또 표현하실지 모르겠지만 박덕흠 의원같이 누가 보더라도 재산 증식에 큰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겼을 경우에는 좀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다음은 성일종 간사님 발언시간입니다마는 잠깐 협의해서 박용진 위원님 간단하게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 때문ですよ, 저도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김병욱 간사님이나 혹은 정무위원장님께서 이런 논란이 없이 오늘 그냥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특별한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았습디다만 지금 윤창현 위원님께서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였고, 또 윤창현 위원님의 지적대로라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8명의 정무위원들의 경우 동료 위원을 해코지하고 억울하게

누명 씌우는 사람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덜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현 위원님께서 교수로서 여러 가지 역할하시고 학문적인 성과 거두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의견은 다르지만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경제 그리고 자본시장의 원활한 성장을 위한 노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윤 위원님께서 들고 나오신 그 공소장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56페이지, 57페이지 그 즈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되고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ISS에게 가서 찬성 의결을 하도록 하는 데 삼성물산의 사외이사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주식 하나도 없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물산 주식 1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삼성물산의 경영진들이, 사외이사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검찰 공소장에 불법 합병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행위 전반에 관련해서 사외이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이 정무위원회에서 따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 그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신청되어 있기도 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위원장 윤관석**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박용진 위원** 법안 심사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산에서 증권에 자기 주주의 정보를 흘리는 불법행위 등과 관련해서도 따져 봐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 삼성물산의 사외이사를 지내셨던 윤창현 위원님이 이해충돌 혹은 국민적 신뢰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그와 관련해서 역할을 회피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속 정당에서 그런 국민적 불신을 쌓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동료 위원을 음해하거나 근거 없이 누명 씌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우리 정무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마무리, 마지막으로 성일종 간

사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우리 위원님들 고생을 하셨고요.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께서 아까 회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회의를 이끌어 가는 간사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오늘 국무조정실장인 구윤철 실장님께서 일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것은 곧 국정을 운영하는데 국회가 꼭 붙잡아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차장께서 오늘 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시간 낭비라든가 업무 방해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신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현안의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국가에 바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있도록 상임위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여당 위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런 현안을 제쳐 두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국민이 우리 국회를 바라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야당한테 기회를 주시고 또 여당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큰일 하셨고요. 삼성 부분에 대해서 합병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박용진 위원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미 밝혔고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과 관련되는 신상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사가 됐든 사외이사가 됐든 경영을 하면서 판단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때 상황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지, 독립적 이사의 지위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범법에 대한 행위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 종료가 됐고 사외이사도 사임된 상태에서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국회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렇게 꼭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우리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현안에 대해서도 더 중심적으로 다루고 또 많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김병욱 간사님, 위원장님 잘 모시고 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나왔던 이야기들, 특히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간사님들하고 더욱더 잘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성과도 내고 또 여야가 다 같이 할 소리는 하는 그런 상임위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오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정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서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가 효율적이면서도 성과가 나는 그런 운영을 해서 정무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저희 정무위가 국정 관리도 하고 또 공정경제를 하는 공정거래위도 있고 또 금융 혁신의 과제도 있고 민생 안정과 보훈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욱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언론의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성숙한 시장경제 질서를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는 여론도 있고 또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또 여야 지도부가 어느 때보다도 서로가 여러 가지 화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양심껏 소신을 가지신 여야 위원님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논의해서 법안 협치를 통해서 우리 경제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민생 안정도 도움이 되고 또 서로가 상생하기 위한 내용의 합리적인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및 청원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무위원회 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강민국	권은희	김병욱	김한정
김희곤	민병덕	민형배	박용진
배진교	성일종	오기형	유동수
유의동	윤관석	윤두현	윤재욱
윤창현	이영	이용우	이원욱
이정문	전재수	홍성국	

○청가 위원(1인)

송재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	용	준
전문위원	김	원	모
전문위원	정	환	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실장	구	윤	철
국무1차장	최	창	원
법무감사담당관	정	일	황

국가보훈처

처장	박	삼	득
기획조정실장	민	병	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성	욱
기획조정관	최	영	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성	수
기획조정관	박		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현	희
부위원장겸사무처장	이	건	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0. 8. 25. 송갑석·인재근·서삼석·조오섭·이장섭·이규민·민형배·안민석·권칠승·이동주·정춘숙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발의)

(2020. 8. 25. 이태규·성일종·이영·박대수·최연숙·태영호·유경준·지성호·이명수·김영식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0. 8. 25. 황운하·이용우·신정훈·김영호·김남국·송기현·장철민·이상민·김민철·진선미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26일 회부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8. 26. 정필모·이용우·박홍근·한병도·송재호·김민석·박광온·강민정·송갑석·오영환·전혜숙·김승원·양이원영 의원 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발의)

(2020. 8. 26. 송언석·정희용·구자근·권명호·김석기·김정재·박덕흠·윤두현·태영호·정진석·성일종·임이자·이종배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0. 8. 26. 김홍걸·김경협·김병기·김수홍·문진석·박주민·안민석·이규민·이용빈·이상현·임오경·임호선·조오섭·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31일 회부됨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0. 8. 31.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1일 회부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0. 9. 1. 이탄희·고영인·김상희·김성주·김용민·박광온·박용진·박주민·오영환·우원식·이용빈·이정문·이재정·최인호·최혜영·홍익표·윤미향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9. 1. 성일종·김태흠·박덕흠·이명수·송석준·이용·이종배·김정재·강기윤·추경호 의원 발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9. 1. 이병훈·송갑석·김승원·신정훈·이성만·박영순·박성준·박정·이수진(비)·윤미향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일 회부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9. 2. 안민석 · 김민철 · 문진석 · 박성준 · 서동용 · 서영석 · 송갑석 · 윤미향 · 윤재갑 · 이수진(비) · 이인영 · 조오섭 · 한병도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9. 2. 정부 제출)

상장회사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0. 9. 2. 김병욱 · 도종환 · 신동근 · 이해식 · 최인호 · 서동용 · 이상현 · 김정호 · 민형배 · 김종민 · 김한정 · 홍성국 · 김민철 · 이상민 · 정정순 · 강병원 · 김수홍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0. 9. 2. 황희 · 김병기 · 강병원 · 김철민 · 이원욱 · 도종환 · 한병도 · 어기구 · 신영대 · 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3일 회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20. 9. 3. 김한정 · 이상현 · 전해숙 · 홍기원 · 김용민 · 김경협 · 정춘숙 · 이재정 · 이수진(비) · 이성만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9. 3. 이용우 · 유동수 · 오영환 · 김진표 · 이수진 · 이탄희 · 고영인 · 이형석 · 황운하 · 오기형 · 양이원영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9. 3. 정부 제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9. 3. 김영호 · 박용진 · 최강욱 · 황운하 · 박성준 · 권칠승 · 김민철 · 신정훈 · 강득구 · 전해숙 · 김영배 · 양정숙 · 박영순 · 민홍철 · 이수진(비) · 맹성규 · 송갑석 의원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0. 9. 3. 민병덕 · 임종성 · 서영석 · 홍성국 · 배진교 · 김윤덕 · 송옥주 · 천준호 · 송재호 · 강병원 의원 발의)

이상 5건 9월 7일 회부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9. 7. 이주환 · 김예지 · 김정재 · 서일준 ·

윤창현 · 김용관 · 권명호 · 김희곤 · 金炳旭 · 지성호 · 김기현 · 정동만 · 강민국 · 최승재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0. 9. 7. 이태규 · 성일종 · 박대수 · 최연숙 · 이명수 · 김영식 · 김정재 · 김석기 · 조정훈 · 허은아 · 윤영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8일 회부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0. 9. 8. 한병도 · 김승원 · 김민철 · 이형석 · 오영환 · 이상현 · 권칠승 · 정일영 · 허영 · 박재호 · 박상혁 · 이원택 · 신영대 의원 발의)

9월 9일 회부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박대출 · 김영식 · 조명희 · 허은아 · 황보승희 · 박성중 · 정희용 · 김석기 · 이주환 · 권명호 · 윤창현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성일종 · 김희국 · 지성호 · 이영 · 김희곤 · 추경호 · 전주혜 · 이명수 · 강민국 · 한기호 · 김형동 · 조수진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민형배 · 이용빈 · 우원식 · 윤영덕 · 김교홍 · 소병훈 · 이형석 · 이정문 · 박홍근 · 이병훈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이종성 · 정운천 · 김형동 · 한무경 · 임이자 · 김석기 · 허은아 · 김예지 · 김성원 · 최승재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태영호 · 송언석 · 이명수 · 정희용 · 홍준표 · 김정재 · 박성중 · 한기호 · 이주환 · 김석기 · 지성호 · 김용관 · 조정훈 의원 발의)

이상 5건 9월 10일 회부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9. 10. 성일종 · 이종배 · 이명수 · 김희국 ·

추경호 · 김태흠 · 태영호 · 한기호 · 김형동 · 이태규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0. 9. 10. 이용호 · 양정숙 · 한병도 · 김남국 · 김수홍 · 김경만 · 전용기 · 김윤덕 · 이상현 · 민병덕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0. 9. 10. 유동수 · 박정 · 송옥주 · 정춘숙 · 이상직 · 허종식 · 김종민 · 김교홍 · 홍영표 · 윤관석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0. 9. 10. 윤영석 · 권성동 · 이종배 · 구자근 · 임이자 · 강기윤 · 이태규 · 윤상현 · 김태호 · 최형두 · 이채익 · 홍준표 · 최승재 · 배현진 의원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0. 9. 10. 김남국 · 이용빈 · 황운하 · 송재호 · 김승원 · 정성호 · 이규민 · 윤영덕 · 이성만 · 이수진(비) · 오영환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0. 9. 10. 김병욱 · 이상현 · 고용진 · 이광재 · 민형배 · 최인호 · 김민철 · 이상민 · 정정순 · 강병원 · 김수홍 · 김승원 의원 발의)

이상 6건 9월 11일 회부됨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심상정 · 류호정 · 강은미 · 이은주 · 배진교 · 장혜영 · 정성호 · 박영순 · 김민석 · 강민정 의원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홍성국 · 이상민 · 한준호 · 민병덕 · 박재호 · 강선우 · 송재호 · 이원욱 · 임종성 · 김병욱 · 인재근 · 이용빈 · 양기대 · 김경협 · 위성곤 · 윤관석 · 김성주 · 이용우 의원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홍성국 · 강선우 · 김경협 · 김병욱 · 김성주 · 민병덕 · 박재호 · 송재호 · 양기대 · 윤관석 · 이개호 · 이상민 · 이용빈 · 이용우 ·

이원욱 · 이형석 · 인재근 · 임종성 · 한준호 의원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홍성국 · 이상민 · 한준호 · 민병덕 · 박재호 · 강선우 · 이형석 · 송재호 · 이원욱 · 임종성 · 인재근 · 김병욱 · 이용빈 · 양기대 · 김경협 · 윤관석 · 김성주 · 이용우 · 이개호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홍성국 · 이상민 · 한준호 · 민병덕 · 박재호 · 강선우 · 이형석 · 송재호 · 이원욱 · 임종성 · 인재근 · 김병욱 · 이용빈 · 양기대 · 김경협 · 윤관석 · 김성주 · 이용우 · 이개호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홍성국 · 강선우 · 김경협 · 김병욱 · 김성주 · 민병덕 · 박재호 · 송재호 · 양기대 · 윤관석 · 이상민 · 이용빈 · 이용우 · 이원욱 · 이형석 · 인재근 · 임종성 · 한준호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홍성국 · 이상민 · 한준호 · 민병덕 · 박재호 · 강선우 · 이형석 · 송재호 · 이원욱 · 임종성 · 인재근 · 김병욱 · 이용빈 · 양기대 · 김경협 · 윤관석 · 김성주 · 이용우 · 이개호 의원 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홍성국 · 강선우 · 김경협 · 김병욱 · 김성주 · 민병덕 · 박재호 · 송재호 · 양기대 · 윤관석 · 이개호 · 이상민 · 이용빈 · 이용우 · 이원욱 · 이형석 · 인재근 · 임종성 · 한준호 의원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강민국 · 한무경 · 김영식 · 박덕흠 · 양금희 · 유경준 · 金炳旭 · 권명호 · 박성민 · 허은아 · 서일준 의원 발의)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박재호 · 허영 · 정춘숙 · 조정식 ·

홍성국 · 김윤덕 · 오영환 · 김정호 · 이용빈 ·
김영배 의원 발의)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박재호 · 허영 · 정춘숙 · 조정식 ·
홍성국 · 김윤덕 · 오영환 · 김정호 · 이용빈 ·
김영배 의원 발의)

이상 11건 9월 14일 회부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허영 · 전채수 · 강선우 · 김윤덕 ·
박상혁 · 이용빈 · 한병도 · 서동용 · 설훈 ·
양이원영 · 이원욱 · 이수진(비)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허영 · 전채수 · 강선우 · 김윤덕 ·
박상혁 · 이용빈 · 한병도 · 서동용 · 설훈 ·
양이원영 · 이원욱 · 이수진(비) 의원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
발의)

(2020. 9. 14. 김민철 · 장철민 · 안민석 · 민형배 ·
김철민 · 임오경 · 강선우 · 오영환 · 변재일 ·
서영석 · 이동주 · 이성만 · 김경만 · 박영순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허영 · 전채수 · 강선우 · 김윤덕 ·
박상혁 · 이용빈 · 한병도 · 서동용 · 설훈 ·
양이원영 · 이원욱 · 이수진(비)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이용우 · 유동수 · 홍성국 · 송영길 ·
이병훈 · 홍정민 · 박홍근 · 윤준병 · 강준현 ·
신정훈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이용우 · 유동수 · 홍성국 · 송영길 ·
이병훈 · 홍정민 · 박홍근 · 윤준병 · 강준현 ·
신정훈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허영 · 전채수 · 강선우 · 김윤덕 ·
박상혁 · 이용빈 · 한병도 · 서동용 · 설훈 ·
양이원영 · 이원욱 · 이수진(비)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2020. 9. 14. 조경태 · 태영호 · 유경준 · 강대식 ·
윤두현 · 김예지 · 김형동 · 추경호 · 이용 ·
백종현 · 홍문표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이용우 · 유동수 · 홍성국 · 송영길 ·
이병훈 · 홍정민 · 박홍근 · 윤준병 · 강준현 ·
신정훈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이정문 · 김철민 · 안민석 · 기동민 ·
서영석 · 문진석 · 김홍걸 · 황운하 · 조승래 ·
이탄희 · 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10건 9월 15일 회부됨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김상희 · 인재근 · 양정숙 · 류호정 ·
이성만 · 남인순 · 오영환 · 최혜영 · 강민정 ·
권철승 · 김승원 · 황운하 · 신정훈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이태규 · 김영식 · 양향자 · 성일종 ·
김정재 · 유동수 · 이종성 · 조정훈 · 유경준 ·
김석기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윤관석 · 김교홍 · 김병욱 · 김영배 ·
박광온 · 박찬대 · 유동수 · 이상현 · 이성만 ·
이장섭 · 정일영 · 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6일 회부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0. 9. 16. 전봉민 · 강기윤 · 서정숙 · 정동만 ·
이현승 · 김미애 · 서병수 · 백종현 · 최형두 ·
이종성 의원 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2020. 9. 16. 오기형 · 권인숙 · 김남국 · 김종민 ·
김한정 · 박상혁 · 박재호 · 박주민 · 소병철 ·
송재호 · 신원식 · 윤영덕 · 이용우 · 전채수 ·
최강욱 · 황운하 의원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020. 9. 16. 배진교 · 서동용 · 허종식 · 민병덕 ·
오기형 · 장혜영 · 이은주 · 강은미 · 류호정 ·

심상정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20. 9. 16. 윤관석 · 고영인 · 고용진 · 김병욱 · 김영배 · 오기형 · 이원욱 · 이장섭 · 임오경 · 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1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0. 8. 26. 송언석 · 정희용 · 구자근 · 권명호 · 김석기 · 김정재 · 박덕흠 · 윤두현 · 태영호 · 정진석 · 성일중 · 임이자 · 이종배 의원 발의)

8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31. 고민정 · 김경만 · 강훈식 · 신영대 · 송갑석 · 김성환 · 오영환 · 박성준 · 이용선 · 최혜영 · 김남국 · 김용민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8. 31. 정태호 · 박정 · 이인영 · 황희 · 허영 · 이장섭 · 정일영 · 이성만 · 한병도 · 전용기 · 김경만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한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0. 9. 1. 이양수 · 추경호 · 송석준 · 김성원 · 조수진 · 이철규 · 한기호 · 유상범 · 이광재 · 송기현 · 허영 · 권성동 의원 발의)

9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20. 9. 2. 이상민 · 박성준 · 황운하 · 기동민 · 조승래 · 김민기 · 김병욱 · 한병도 · 김승남 · 어기구 · 윤관석 의원 발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0. 9. 2. 김영주 · 박정 · 안민석 · 김영호 · 허종식 · 임호선 · 윤건영 · 민형배 · 이재정 · 서영교 · 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9. 3. 박재호 · 전재수 · 최인호 · 김정호 · 허영 · 한병도 · 정춘숙 · 김두관 · 홍성국 · 송재호 의원 발의)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0. 9. 3. 강득구 · 박정 · 양이원영 · 이소영 · 김영배 · 오영환 · 신정훈 · 이용빈 · 윤준병 · 윤재갑 · 김정호 · 양정숙 · 박성준 · 윤미향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0. 9. 7. 구자근 · 최형두 · 정희용 · 김용환 · 송언석 · 권명호 · 이달곤 · 강기윤 · 김영식 · 윤영석 의원 발의)

9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김영주 · 안민석 · 민형배 · 임호선 · 허종식 · 서영교 · 김영호 · 이재정 · 유정주 · 박광온 의원 발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김병주 · 안규백 · 김남국 · 양정숙 · 김민기 · 황희 · 김진표 · 윤영찬 · 김홍걸 · 김주영 · 이용빈 · 윤미향 · 윤재갑 · 양기대 · 임호선 · 박정 · 이용우 · 이해식 · 홍영표 · 양이원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장경태 · 김민석 · 김영진 · 김용민 · 박정 · 오영환 · 유정주 · 이규민 · 이소영 · 이탄희 · 전용기 · 최혜영 의원 발의)

9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징벌배상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오기형 · 박상혁 · 김용민 · 강득구 · 이용빈 · 강병원 · 노웅래 · 유정주 · 전해철 · 윤준병 · 김수홍 · 이형석 · 오영환 · 진성준 · 장경태 · 위성곤 · 천준호 · 민형배 · 이용우 ·

이수진 · 윤미향 · 홍영표 · 임오경 · 이수진(비) ·
황운하 · 박영순 · 이규민 의원 발의)

집단소송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오기형 · 강득구 · 강병원 · 김수홍 ·
김용민 · 노용래 · 민형배 · 박상혁 · 박영순 ·
배진교 · 오영환 · 위성곤 · 유정주 · 윤미향 ·
윤준병 · 이규민 · 이수진 · 이수진(비) · 이용빈 ·
이용우 · 이형석 · 임오경 · 장경태 · 전해철 ·
진성준 · 천준호 · 홍영표 · 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0. 9. 16. 허영 · 이원욱 · 양이원영 · 신영대 · 전
재수 · 위성곤 · 박재호 · 김두관 · 전용기 · 소
병훈 · 권인숙 · 우원식 · 박상혁 의원 발의)
9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
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